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 착수

여가부, 재단 권리의무 관계 등 절차 밝히야 이사회 없어 정부 직권으로 해산 들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비판을 받아왔던 화해·치유재단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여가부(여가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2016년 7월 출범했다. 일본 정부가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여가부는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산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1월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법인 해산을 위해 ▲재단 권리의무 관계 ▲재단 잔여사업 ▲재단 직원 고용관계 ▲재단 채무 관계 등 민법상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가부는 이날부터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산을 거처하면 해산법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용관계가 해소될 것"이라며 "청산 과정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2~3명 남겨둘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관상 재단을 해산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재단에는 이사회가 없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것 때문에 이사를 새로 뽑거나 퇴임한 이사를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었다"고 답했다. 법인 해산의

청산인은 법원에서 선임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사회가 없어 법원에서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10월말 기준 재단 잔여자금 57억 8000만원과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 처리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또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그것도 청산 절차의 일환이다. 청산 절차를 하면서 처리하게 될 문제"라며 "지금 정해진 것은 없다. 법원 결정까지 고려하면 3~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인한 일본의 반발은 과제다. 당초 여가부는 10월말 11월초 재단 해산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외교적 문제로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도 이날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 하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곧바로 초치했다. 여가부 측은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

며 "앞으로 대응은 합리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이날 공식 발표되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집 등을 방문하며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게 외교사안이다보니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문화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화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여야,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윤창호법·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 처리

정기국회가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5당 원내지도부가 21일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막판 진통 끝에 최종 타결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화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은 총 6가지 사항으로, 우선 21일부로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되,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대법관 후보자에

고용세습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 추진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여야 5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무장점 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서울 연속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논의했으나 큰 이견차로 매번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일부터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을 본격화하면서 정부 예산안 심사와 각종 법안 처리 등에 더 난항을 겪었다. /뉴시스

'포용국가' 달성 위해 머리 맞대다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자문위 오찬간담회

문 대통령 "지금까지는 국정과제 설계, 이제는 성과 보여야 내년은 정부 의지 따라 예산 편성 사업 시행하는 첫 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협의회와 자문기구 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핵심 사회정책 기조인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향후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90여분간 청와대 집현실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듭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조선시대 학자들이 집현전에서 왕과 왕세자가 바른 정치를 펴도록 영연과 서연으로 도운 것처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집현실을 장소로 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서 따온 이름"이라며 "국정과제협의회 위원장들, 국가자문위원장들을 한자리에 모시니

정책 박람회 및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회 개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계획안을 발표했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조로 포용, 분권, 혁신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한국형 계획 협약제도 실시 ▲지역 혁신체계 구축 ▲생활 SOC 정책 토대 마련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에 방점을 찍은 발제를 이어갔다.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올해 열심히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정해구 "포용국가·평화번영 통합... 국가미래비전 2040 마련" 송재호 "포용·분권·혁신, 새 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 기조" 장병규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추진 진력... 혁신성장 추진할 것"

집현실이라는 이름이 아주 잘 부합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각 위원회의 성과, 활동 방향에 대한 보고를 넘어서서 지금 국정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국정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집현실답게 좋은 말씀들 편하게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각 위원회의 주요 보고사항을 청취했다.

'국정과제협의회 운영성과 및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포용과 혁신, 평화와 번영 정신 아래 국가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 과제 이행 주요 의제 우선순위 설정 ▲국정 과제 토론 활성화 및 정책연구기관 협업 ▲포용국가 전략회의 개최 적극 지원 ▲국가 미래 비전 2040 수립 ▲내년 5월 국정과제

"앞으로 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며 "지금까지는 국정 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 성과와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구현자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또 "특히 내년은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 해다. 그 과정에서 국정 과제와 핵심 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해달라"며 "나아가 보장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국정 과제 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에서는 열한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함께했다. 공식 출범을 앞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상현 위원장도 참석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제17회 전라북도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11월 24일(토) 오후 3시
전주 중부교회 비전센터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문의: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063-288-9700)